

한국사회에서 정치적 시민성의 의미

심 연 수 (Shim, Yeon-Soo)*

(E-mail : shimys@honam.ac.kr)

논문접수일 : 2010년 4월 23일

논문심사일 : 2010년 4월 28일

게재확정일 : 2010년 5월 24일

* 학위취득대학: 서울대학교
현직: 호남대학교 교수

한국사회에서 정치적 시민성의 의미 *

<국문요약>

한국사회는 정치적으로 매우 성숙한 단계로 진입하고 있다. 민주주의 공고화 과정을 거치면서 분별력 있는 정치적 시민성이 시민들의 의식으로 자리잡아가면서 더욱 성숙한 민주사회를 구현해 나가고 있다. 한국정치는 거대 양당을 주축으로 한 다당제 하에서 연합민주정치가 발전되어가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한국정치에서 발현되고 있는 시민들의 정치적 시민성은 정부와 체제 및 체계와의 투입 산출 과정을 통해 발전되어 오고 있다.

특히 최근에 이르러서는 규범적인 윤리 도덕에 강조를 한 반정치적 전통으로부터 벗어나서 대화와 타협을 통해 공적 이익을 창출하기 위한 사회적 합의를 그 내용으로 한 정치적 시민성이 발전되고 있다. 과거 냉전 하에서 정치체제의 안정과 존속을 강조하였던 정치 윤리적인 측면에서 벗어나서 공적 이익을 창출해 나가기 위한 분별력 있고 비판합리적인 이성을 계발하는 방향으로 시민들의 정치적 시민성은 함양되어야 한다.

본 논문에서는 한국사회에서 제기되고 있는 시민성개념의 다양한 정의와 정치적 시민성의 의미를 규정해 보고 한국정치현상에서 나타난 정치적 시민성을 복잡계론의 개념들로 분석해 보았다.

[주제어] 정치적 시민성, 복잡계, 한국정치, 연합정치, 사회화, 반사회화, 정치적 성숙

* 2010년 4월 28일 호남대 인문사회과학연구소 주최, “글로벌시대를 맞이하여 세계시민의식함양을 위한 포럼”에서 발표된 논문을 수정 보완한 논문임.

I. 서론

2010년은 대한민국 국민들에게는 과거를 되돌아보아야 하는 매우 의미 있는 해가 되고 있다. 먼저 경술국치, 즉 과거 일본제국주의에 의해 국권이 상실되었던 100년이 되는 해이고 일본으로부터 해방된 이후 다시 일본과 국교를 수립한 지 45년 되는 해이다. 또한 한국전쟁이 발발한지 60년이 되는 해이면서 4.19혁명 50주년이 되는 해이다. 국제관계의 역학구조변화가 거시적으로 가장 큰 원인이 되기도 했지만 변화에 대한 지혜로운 대처를 하지 못한 상태에서 국내 사회적 불안이 증폭되어 한일병합과 한국전쟁이 일어나지 않았는가? 구한말에 한반도를 관찰한 많은 서양인들은 한국사람 개개인들은 매우 우수하지만 지도자들이 정치를 잘못하게 되어서 나라를 잃었다는 평가를 하였다(심연수, 3).

해방 이후 한국인들은 매우 짧은 시간에 근대화과 민주화의 양 날개를 달고 세계를 향해 비상하고 있다. ‘가깝고도 먼 나라’로 불리는 일본은 근대에 서양문명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였고 2차 세계대전에서 패망한 이후로 국가부흥에 힘써 세계의 경제대국으로 발돋움 하였다. 하지만 정치에서 볼 때, 자민당이 54년을 집권하고 2009년에 이르러서야 민주당이 집권하였다. 중국은 경제적으로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으나 정치시스템이 서구 민주주의 정치시스템과는 다른 시스템을 갖고 있다. 민주주의는 주기적인 정권교체를 갖는 시스템이라고 슉페터는 말한 바 있다. 대한민국 국민들은 해방 이후 많은 정치적 시련을 갖기도 했으나 대부분 많은 측면에서 성공한 최고 정치지도자들을 선거를 통해서 선출하였다. 대한민국의 국민 대다수는 매우 짧은 시간에 다양한 정치적 경험을 통해 민주주의 정치시스템을 뿌

리 내리는 데 기여하고 있다(Ibid).

한국사회에서 시민성은 매우 놀라운 정도로 변화발전하고 있다. 과거 한 세기에 비해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질적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정치학자들은 성숙한 분별력 있는 민주주의(deliberative democracy) 사회에 도달했다고 평가하기도 한다. 하지만 시민들이 추구하는 정치적 이상이나 체제의 달성에 필요한 요구조건을 성취하기 위해서 보다 정치적 성숙(political sophistication)¹⁾을 필요로 하고 있다. 세계화 시대의 다문화사회에서 전통적인 한국인들의 의식과는 달리 서구화된 정치시스템 하에서 합리적이고 바람직한 시민의식이 나타나고 있다. 본고에서는 한국사회의 정치적 특성과 정치적 시민성을 복잡계론의 시각으로 설명하고 분석한다.

II. 복잡한 시민성과 정치적 시민성

시민성에 관련된 다양한 해석이 존재하지만 현대사회의 보편적 가치인 시민성은 시민사회의 덕성으로서 근대적 인간이 자기 자신만을 위한 편협하고 이기적인 특수 이익에의 경도를 자제하고, “공동의 이익에 우선권을 부여하고자 하는” 자발적 의지와 심리적 준비 상태를 의미한다(심연수 2008,7-8). 시민성은 인간이 자신의 이익보다는 공동의 이익을 우선하는 것으로써 근대 시민사회의 기반이 되는 원리다. 자유주의원리에 근거를 둔 시민은 다음과 같이 설명된다.²⁾

전통적으로 한국사회에서 시민성(citizenship)은 시민으로서 요구

1) 정치적 성숙은 정치적 인식, 정치적 선호형성, 정치적 참여, 정치적 관용을 필요로 한다(신도철·민병원, 390).

2) 이하내용은 심연수, 시민성과 교육(광주:광인문화사, 2008), pp.17-21 내용 축약 재구성했음.

되는 자질이라는 뜻을 강하게 갖고 있다. 즉 개인으로서 요구되는 자질이 아니라 특정한 공동체의 구성원 즉 시민으로써의 지위에서 요구되는 자질을 말한다. 따라서 시민성은 상호관계의 의미로 독립된 개인으로써가 아니라 사회인 전체로써 의미로 그 근거를 찾아왔다. 한국 사회의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지녀야 할 책임 공동목적, 공동체 의식 등의 의미를 담고 있었다. 그리하여 시민성은 일종의 도덕적 자질이며 경쟁보다는 협동에 그리고 개인적 합리성보다는 집단적 연대에 우선적이며 상위의 가치를 부여하는 공동체의식으로 보아왔다. 하지만 이런 공동체적인 측면에서 벗어나서 세계화 시대의 시민성 논의로 나아가야 할 필요가 있다. 최근에 들어서서 시민성 논의는 자유주의적, 시민 사회적, 그리고 문화적 접근 방식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다.

시민성(citizenship)의 목표는 “선량한 시민성”을 의미하고 도덕적이고 인간다운 지적인 시민들을 위한 책임 있는 행동을 강조한다. 전형적으로 시민성은 투표하고 법률에 복종하고 정치적 문제들에 대한 견해를 표현하고 공직에 입후보하는데 있어서 정치적 쟁점들에 관한 폭 넓고 도덕적인 결정을 하는 것을 포함한다. 현대 사회에 있어서 시민성은 이웃들의 필요에 대한 공감의 능력이며 공동체적 목적의 실현을 위한 자발적 봉사의 의지인데, 그것은 사익을 추구하기 위한 이기적 재능이 아니라 그에게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의 지위를 부여하는 일종의 덕성이다. 시민성은 일종의 도덕적 자질이며, 경쟁보다는 협동에, 그리고 개인적 합리성보다는 집단적 연대에 우선적이며 상위의 가치를 부여하는 공동체적 의식으로 볼 수 있다.

시민성을 형식적 관점과 내용적 관점에서 논의하기도 하는데 형식으로 보는 관점에서는 시민성이 추구하는 관점을 선택적 합리성을 추구하는 것으로 보는 견해도 있고 시민성을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

를 주관적인 숙고와 추론을 토대로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규정하기도 한다. 그리고 내용으로 보는 관점은 시민성을 도덕적 관념으로 보아서 공리나 덕목 내지는 품성 등을 핵심적인 것으로 규정하기도 한다. 한편, 정치적 시민성 논의에 대해서는 시민성은 공동체 공간의 공론장의 발현이라고 보기도 하며 한국의 세계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민족적 정체성과 사회적 권리를 포함하는 민주적 시민성을 상호보완적인 관계로 해석하기도 한다. 그리고 시민성을 일상생활의 비민주적인 의식과 태도 행위 그리고 관행을 인식하고 개선하기 위한 생활 속의 민주주의에서 논의하기도 한다. 이런 맥락에서 시장 경제체제에 효과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지식과 기능, 가치 및 신념을 경제적 시민성의 주요 내용으로 하는 경제적 시민성 논의도 활발하다. 탈냉전 이후 국경이 무너지면서 다문화공생사회가 형성되고 있다. 한국사회도 다문화사회로의 진입이 가속화되면서 세계시민성 개념이 기존 시민성 개념을 대체하고 있다. 기존의 시민성에 관한 연구는 그 영역을 공공영역, 시민영역, 시장영역, 개인영역 등으로 구분하여 시민성의 함양에 발전 방향을 개념규정하고 시민교육의 목표를 설정하여 연구 논의하여 왔다.

정치적 시민성이란 ‘시민 각자가 민주적인 정치생활을 하는데 있어 방향 감각을 획득하고, 자신의 정체성을 유지하는 데 조력하는 것’이다. 여기서 정치적 시민성(political citizenship)은 시민성의 개념과 범위가 광범위하고 복잡하기 때문에 한국인들의 정치생활에서 추구되거나 나타나는 시민성의 개념으로 제한하기로 한다. 인간의 삶의 양식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예술, 종교 등등의 영역별로 구분 지을 수 있지만 삶이 실현되어가는 과정에서는 복합적으로 나타난다. 하지만 정치생활 영역에서 한국사회가 이념적으로 추구하는 방향에 맞춰서 정치적 시민성도 논의될 수 있다.

정치에 대한 다양한 정의가 있으나 이스튼(David Easton)이 정의한 바 “인간의 삶에 있어서 가치를 추구해 나가는데 있어서 권위적 배분과정”이라는 정의에 따르자면, 한국사회에서도 한국인들이 추구하는 물질적 정신적 가치가 있을 것이며 이런 가치는 무한한 것도 있지만 한정되어 있는 관계로 경쟁관계가 나타나고 갈등 분열이 발생한다. 이 때 사회적 합의, 위인, 법, 제도, 관습, 전통 등에 의해서 한정되어 있는 가치를 배분하게 된다. 이런 배분과정에서 한국인들의 정치적 시민성이 나타난다. 한국사회가 추구하는 특정의 이념적인 형태는 동시대인들에게 사회화(socialization)라는 명목으로 다가오든지 아니면 반사회화(counter-socialization)로 작용하게 된다.

이런 맥락에서 그동안 한국에서 실시되었던 민주시민교육은 민주주의 사회의 구성원들에게 요구되는 정치적 시민성을 함양하는 활동을 말하며 시민 정신 또는 시민성함양을 목표로 추구하는 교육을 가리킨다. 그리고 한국에서 그동안 민주시민교육의 일환으로 실시되었던 정치교육은 “한 국가가 그 생활공동체를 유지하고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요구되는 바람직한 인간성을 형성하고 정치과정의 참여에 필수적인 지식과 능력, 태도, 자신 등을 포함하는 자질을 육성하는 교육적 노력”이다(박용현, 264~286). 한국에서는 정치적 시민성을 다루는 명칭으로서 정치교육이란 용어가 사용되어 왔는데 인간교육, 도덕교육, 가치교육, 반공승공통일교육, 민주시민교육, 국민윤리교육, 정치사상교육, 이데올로기교육, 국민정신교육 등으로도 불려왔다. 결국 정치적 시민성을 함양하기 위한 정치교육은 “정치현상에 대한 과학적 이해, 정치적 갈등의 문제해결력, 정치적 정체성의 확립, 정치적 참여 증대, 정치체제의 발전을 위한 비판적 사고력과 충성심의 함양 등과 함께 교육방법면에서는 직접적이고 주입식 방법보다는 학습자가 스스로 가치를 내면화할 수 있는 개방적, 자주적, 자율적인 학습방법의

채택”을 중요한 과제로 갖게 된다.

또한 정치적 시민성을 함양해 나가기 위한 정치교육의 기능은 1) 정치 및 사회생활의 질서를 유지하게 하며, 2)국민적 일체감을 형성하게 하고 사회적 통합의 기반을 조성하게 하며, 3)국가, 정치, 정책의 목표설정의 일관된 기준의 구실을 제공하게 하며, 4)국민 각자의 인생목표 및 행동양식의 설정, 선택, 비판 등의 기준으로서의 구실을 제공하게 하고, 5)소수인에 의한 급격한 정치적 변동과 변혁을 위한 대책에 저항하게 하면, 6)외국의 침략과 부당한 간섭에 대한 국민적 저항의식을 고취하게 된다는 점 등으로 볼 수 있다(S. A. Renshon, 5-9). 정치교육의 목적은 “국가라는 생활공동체의 안정과 유지, 그리고 발전을 위해 요구되는 가치관, 지식, 태도 등을 육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지구상 과거나 현재 어느 국가를 불문하고 정치적 시민성을 함양하기 위한 교육이 실시되지 않은 적은 없었다. 과거 통일 이전의 서독에서는 민주주의 이념과 민주적인 교육방식에 따라서 지금까지 지배체제의 권위적인 힘에 의해서 강요되어 왔던 것이 ‘동료적인 협동’으로 바뀌고 국가권력으로 인한 ‘자발적인 복종’ 대신에 ‘대화와 설득’의 원칙이 적용되었다.³⁾ 미국에서는 사회과에서 공민교육의 일환으로서 시민교육이 실시되어왔다. 1951년에 미국사회과교육협회는 24가지에 달하는 시민성의 내용을 규정하였고 민주적 정치 체제의 유지·발전에 있음을 강조하는 버츠(Butts)는 12가지 민주시민의 덕목을 제시하였다. 시민교육을 통해서 기존의 가치나 규범을 전수하는 사회화(socialization)의 기능을 수행하기도 하지만 모두가 동등한 인간으로서의 권리와 책임을 수행할 수 있도록 돕는 반사회화

3) 과거 서독의 정치교육의 특징이다. 국민윤리학회 편, 정치교육(서울:형설출판사,1984), p.139.

(counter-socialization)⁴⁾의 역할은 새로운 시민성 함양의 가치이며 추구해야 할 방향이 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이 성숙한 정치적 시민이 되기 위해서는 자신들의 권리를 행사하고 책임을 완수하기 위한 지적 기능과 참여 기능을 함양하여야 한다. 정치적 시민은 공공의 문제에 대한 설명, 분석, 평가, 옹호의 능력을 함양해야 하며 정치적 상호작용, 비판과 감시 작용, 투표와 같은 영향력 행사 등으로 영역을 확대해 오고 있다.

III. 한국정치의 특성변화와 복잡계론

현대의 한국정치현상은 매우 복잡해져서 전통적인 방법으로 기술하고 전통적인 방법을 사용해서 제어하기가 쉽지 않다. 한국정치현상을 설명하고 기술하기가 어려워지는 근본적인 이유는 ①한국정치체계를 구성하고 있는 체계구성요소(system components)들이 다양해지고 있고 ②체계 구성요소들 간의 비선형적인 상호작용(nonlinear interactions)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복잡계는 에너지, 물질 그리고 정보의 흐름이 바깥에 공개된 체계이다. 복잡계의 형식과 전체는 복잡계로의 에너지, 물질, 정보의 흐름에 의해서 창조되고 복잡계의 결합력은 흐르는 에너지와 정보의 일부를 사용함으로써 유지된다. 복잡계의 구성요소들은 상호의존하면서도 상호간에 영향을 미친다. 복잡계에서는 수많은 변수가 유기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1대1 대응방식의 기계론적 과학이 적용되지 않는다.

복잡계의 다양한 현상을 분석하는데 유용한 개념인 정치적 에너

4) 반사회화는 독립적인 사고와 이성의 계몽 그리고 책임 있는 사회비판을 강조하는 것으로, 민주적 시민 능력에 있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다.

지와 엔트로피, 공존을 위한 국제사회와의 공진화, 분화와 체계 통제(control), 파국과 혼동 등의 개념들을 활용하여 한국정치 특성을 설명할 수 있으며 정치적 시민성의 내용과 한국사회 유지와 발전에 필요한 정치적 시민성도 설명될 수 있다.

한국정치의 특성 중의 하나는 한국사회의 다양한 갈등을 정치적으로 조정해 나가면서 정치공동체의 생존과 번영을 약속할 수 있는 공적인 합의 내지는 공적 가치를 창출해 내는 능력이 취약하다는 점에 있다는 견해가 있다(이현휘, 167). 전통적으로 지속되어온 유교적인 생각과 행동은 합리적이면서 계산적인 판단이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되는 정치적 시민성의 발달과 많은 갈등과 충돌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다. 사회적 가치의 권위적 분배에 대한 한국정치의 갈등과 합의를 기준으로 해서 한국사회의 정치발전 단계를 다음과 같이 네 단계로 구분해 볼 수 있다.

1. 자유민주주의체제 정립기와 정치적 시민성

국가의 공적 이익을 창출하기 위해서는 씨족 단위의 사적 이익을 넘어서는 헌신이 요구된다(이현휘, 174). 한국정치의 정신적 뿌리는 혈연적 유대에 의한 학벌 지역혈연주의와 유교윤리에 바탕을 두고 있었다. 해방 이후에도 일제의 잔재는 유교윤리와 혈연주의와 혼합된 상태로 국가재건에 영향을 미쳤다. 이전에는 전혀 경험이 없었던 선거와 민주주의 정치시스템이 도입되었지만 운영 방식은 미숙하였다. 덜 훈련되고 과거의 습관에 의해서 정치행위를 하는 시민들은 서구적 민주주의정치를 일거에 뿌리내리게 할 수 없었다. 정치 지도자들 역시 압도적 다수 시민들의 정치정향을 리드하고자 했으나 ‘한국적 민주정치’상황에서 크게 벗어나 있지 않았다. 1948년 제헌국회가 소집

되고 이승만이 초대대통령에 취임하였으나 1960년 4.19 시민혁명은 장기집권과 부정선거에 반발하였고 대통령은 하야 망명하였고 헌법을 개정하여 내각제를 실시하게 되었다.

한편 한반도 주변정세는 열전시대가 끝나고 냉전시대가 열림에 따라 소련과 미국의 기 싸움은 치열해졌다. 이에 따라 그 당시 초강대국 소련과 미국의 합의 하에 모스크바3상회의에서 한반도를 3.8선을 기점으로 나눈 뒤 대립하기로 결정하였다. 남한과 북한은 독자적으로 정부를 세운 뒤 소련의 원조 하에 북한은 남한침공을 결정하였고 1950년에 6.25 전쟁이 일어나는 동안에 한반도는 해방 이후 생산해 놓았던 정치적 에너지를 소진하게 된다. 그리고 이 전쟁 중에 일어난 남한의 작전통수권 포기는 지금까지 논란이 되고 있다. 또한 6.25 전쟁 말쯤에 일어난 중공군의 개입은 이후 소련의 몰락한 뒤에 중국이 소련의 위상을 대신하게 되는 상황의 시발점이 된다. 이런 상황에서 시민들의 정치적 시민성을 찾아보기 힘들었다. 생존과 희생은 시민들에게는 가장 주요한 윤리적인 의미에 기초한 시민성, 그 자체였다.

해방 이후 서구적 시스템의 국가재건과 경제부흥을 향한 시민들의 정치적 에너지는 한국전쟁을 통해서 극한 엔트로피 상태에 도달하게 된다. 이승만 정부는 대선 조작을 통해 독재정치를 확립하려 하자 민주정치를 갈망하는 시민들의 거센 반발을 맞게 된다. 4.19 시민혁명 이후 이승만 정부는 물러나게 되고 한국 정부는 파국상태에 직면하게 되었다. 두 갈래 치기의 상황에서 4.19 시민혁명 정신은 한국인들의 새로운 정치적 에너지로서 작동하게 된다. 혈연주의와 유교주의는 한국인의 오랜 관습이었고 서구의 정치시스템으로 유입된 민주주의는 독재에 대한 저항의식과 혼재되어 당시 한국인의 정치적 시민성으로 나타났다.

또한 구한말에 대한제국이 망할 무렵 서구문명에 문을 걸어 잠근 데에서 원인을 찾을 수 있듯이 2차 대전 이후 미국과 소련이 구조화 시켜 놓은 새로운 질서에 대해서 대한민국은 공존하는 데 실패했다. 평화공존을 위해 국제사회와의 공진화가 매우 필요했던 시점이었으나 전 세계적으로 구조화된 냉전질서 속에서 생존을 위한 대한민국의 반공이념은 다른 세계 국가들과의 공진화를 할 수 없는 요인이 되었다. 한국 정부(government)는 한국인들이 지향하는 가치들을 권위적으로 배분하는데 있어서 완전히 일어서지 못하였고 다른 국가 특히 미국의 힘에 의존하였다. 또한 정치체제(political regime)는 혈연주의와 유교주의, 일제잔재의식과 서양민주주의 사상과 혼재된 상태에서 한국의 정치체계(political system)에 영향을 미쳤다. 특히 중앙집권적인 사상과 관리방식은 지역의 분화를 통한 체계분권에 역행하였고 정치 정보의 소통에 있어서도 특정집단과 엘리트들의 통제로 말미암아 정치체계의 엔트로피를 증대시켜나갔다.

2. 권위주의 체제와 정치적 시민성

박정희 대통령과 전두환, 노태우 대통령 시기가 이에 해당된다. 1961년 정치적 엔트로피가 극한 상황 하에서 5.16 군사정변이 발생하게 되고 이후 30년 동안 군사정권이 한국정치를 주도하게 된다. 정치체제는 권위주의, 행정 능률주의, 혈연주의, 유교 주의적 정서가 팽배하게 되고 경제성장 이데올로기가 서구적 민주정치에 우선하게 된다. 1970년 정부는 고속도로 건설을 계획하여 한강의 기적의 시발점이 되기도 하였으며 경제 개발 계획과 새마을 운동을 통해 한국 경제의 엄청난 활력을 불어 넣었다. 정치적 에너지는 경제개발에 대한 국민

의 전폭적 기대와 희망에 비해서 잠재된다. 성장을 위한 국민의식 계몽은 공동체주의로 꽃을 피우게 된다.

서구 민주주의의 진정한 개인주의 정신은 망각되었고 합리적 계산과 비판적 능력을 향상시켜 나가는 정치적 시민성은 강조되지 못하였다. 1960년대 말부터 전 세계적으로 냉전체제의 일시적 화해가 모색되면서 상해공동성명에 이은 미국과 중공의 국교정상화는 한반도에 남북대화를 갖는 환경을 조성했다. 정치체제는 주변 국제정세 흐름에 공진화를 하였지만 정치체제의 지속과 체제안정의 명분하에 1972년 영구 집권을 위한 유신체제가 출범한다. 이를 통해 한국사회는 민주사회를 잃어버리게 되었고 정치적 엔트로피가 극한 상황으로 치닫게 된다. 정치적 자유와 표현의 자유는 정부의 통제를 비교적 많이 받았고 시민사회에서는 민주사회를 향한 새로운 정치적 에너지를 생산해 나가기 시작했다. 1970년 청계천 피복노조에서 노동운동을 하던 전태일이 '사람답게 살 권리'를 주장하며 분신 자결함으로써 한국 노동운동의 불씨를 지피는 동시에 정부주도의 개발정책에 대한 개인적 삶의 중요성이 부각된다. 1979년 박정희 전 대통령이 피살된 후 한국 정치체제는 다시 혼돈(chaos)을 맞게 된다. 정치체제의 혼돈 속에 신군사 정부가 들어서게 되는데, 민주화를 향한 열망과 신군부 정부의 통제 하에서도 5.18민주화운동과 같은 체제전환의 결정적 계기가 되는 끌개(attractor)가 나타났다.

결국 6.29선언을 통해 시민사회는 정치체제와의 협력적 관계를 갖게 되면서 체제 질식 현상을 극복하게 된다. 권위주의 체제를 벗어나기 위한 모습들이 나타나는 데, 평범한 보통사람의 이미지가 강조되면서 정치적 시민성은 타협과 조화, 중산층, 중용 등의 의미를 내포하게 되었다. 1988년에 대한민국은 재도약 하게 되는 계기를 갖게 된다. 88올림픽을 계기로 국가 이미지 상승은 물론 국제 외화를 상당수 유

치하게 되어 사회 경제 정치를 비롯한 모든 분야에서 상승효과를 가져오게 된다. 외부로부터 유입된 정보(information)와 물질-에너지(matter-energy)는 정치체제의 지속과 성장을 강화시켜 주었다. 시민 사회에서 성숙되어 나가고 있던 정치적 시민성은 국가발전과 성장을 위한 국민계몽적인 차원을 넘어서서 비판 합리적 의식을 갖게 된다. 국가 공동체에 대한 헌신과 희생, 애국심에 서구 민주주의의 비판 합리적 의식이 합쳐지는 가운데 전통적인 유교주의, 혈연지역주의 등이 혼재된 상태로 정치적 시민성이 나타난다. 또한 냉전체제의 붕괴와 자유주의의 전 세계적 확산 속에서 과거의 이념 대결 하에서 적이었던 국가들과의 국교를 수립하게 되고 그에 따라 정치적 시민성은 배타주의가 아닌 포용과 화해의 덕목을 수용하게 된다. 권위주의적 정부의 성격변화로 인한 정치체제의 유연성과 탄력성이 돋보이는 동시에 시민단체들이 주도해 나가는 시민사회의 반사회화(counter-socialization)는 정치적 시민성의 새로운 내용영역으로 자리를 잡게 된다.

3. 연합정치시대와 정치적 시민성

1990년에 3당 합당과 같은 연합민주주의의 초보적인 형태가 나타난다. 1987년 6월 항쟁으로 쟁취한 대통령 직접 선거에서 신군부는 재집권에 성공했지만, 1988년 총선에서 패배하여 여소야대 정국이 형성되었고, 당시 대통령은 통일민주당, 신민주공화당과 합당하여 민주자유당을 출범시켜 여소야대를 극복하게 된다. 3당 합당은 정당의 정체성을 훼손하였지만 지역감정을 악화시켰다는 의미도 갖는 동시에 타협과 협상이란 민주주의 가치를 실현한 측면도 있다. 1995년에는

플뿌리 민주주의인 지방자치제가 헌정사상 최초로 실시되었다. 당시 여당인 민자당은 15대 광역단체장 중에서 5개구에서만 승리하는 참패를 기록하였다. 하지만 분권화와 기초 및 지방이란 용어가 강조된 정치적 시민성이 논의되었다.

1993년에 들어서 문민정부는 권위주의 정치 체제를 벗어나는 계기가 되었는데 김영삼 대통령은 초기 집권 당시와는 달리 임기 마지막 막연도에 비리를 비롯한 많은 사건에 휘말리게 되었으며 한국경제의 IMF라는 과제를 떠맡기고 퇴임하게 된다. 1994년 김일성 사망 이후 등장한 북한의 김정일 정부 출범 뒤 북한체제는 더욱 폐쇄적이고 친중국적인 태도를 갖게 된다. 1997년 한국경제가 국제외화 부족으로 IMF를 통해 부채를 내게 되었지만 금모으기 운동 등 IMF체제 3년 만에 빌렸던 돈을 다 갚게 되었다. 이 때 다시 과거 3당 합당의 정치적 행태는 김대중과 김종필의 연합(소위 DJP 연합)에 의한 국민의 정부 창출로 반복되면서 향후 한국 민주주의에서 타협과 협상정신을 기반으로 하는 정치적 시민성을 논의하는데 더욱 기여하였다. 연합은 윤리가 아닌 정치로서 타협과 협상의 결과인데, 이 당시 한국인들의 대다수는 야합과 이합집산이라는 통상 비윤리적인 성격으로 간주하였다. 하지만 3당 합당과 DJP 연합은 한국인들에게 윤리적인 판단에 기초한 정치적 사유에서 벗어나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 즉 한국인들에게 이와 같은 연합정치는 비윤리적인 용어들로부터 벗어나서, 한국 사회의 다양한 갈등을 정치적으로 조율하면서 공적 합의나 공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능력을 갖도록 하는 계기가 되었다.

권위주의 체제하에서 형성되어온 시민사회의 민주화에 대한 열망을 통해 정치적 에너지가 발산되어 왔고 체제 엔트로피는 줄어들었다. 윤리적으로 서로 합해지기 어려운 정치세력들이 타협과 협상을 통해 '사회적 가치의 권위적 분배'를 이루어 낸 점은 한국사회가 보다

민주주의적인 방법으로 갈등을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기폭제 역할을 하였다. 이런 방법은 과거 적이었던 북한에 대해서도 적용되어 한반도의 긴장을 완화해 주었고 포용과 관용의 가치를 정치적 시민성의 영역으로 끌어들었다.

사실상 3김 시대가 종식된 이후 참여정부의 등장은 한국정치 패러다임에서 권위시대를 마감하게 한 계기가 되기도 하였지만 여권 분열, 대통령 탄핵 등의 정치적 혼란과 계층 간 갈등을 유발하였다. 호남지역민들의 선택은 정치적 사고에서 보다 전략적 연합민주주의적인 분위기를 유발하였고 과거 ‘보통사람’론과 다른 서민 스타일이 국민들에게 자연스럽게 다가와서 정치적 삶의 영역을 중앙이 아닌 지역분권화에 보다 밀착되는 방향으로 인도하였다. 하지만 보수는 보수끼리 진보는 진보끼리의 연합적인 형태가 진보속의 보수와 보수속의 진보로의 연합형태로의 확대발전을 해나가면서 한편에서는 사회적 긴장과 갈등도 야기하였다. 한국인들에게 정치적 삶은 윤리적인 측면으로부터 벗어나서 이해관계의 득실을 따져보는 보다 정치적인 측면에 비중을 두는 방식으로 나아갔다.

4. 세계화 다문화사회 시대의 정치적 시민성

다양한 정치적 경험을 통해 한국인들은 보다 넓은 가슴으로 분별력 있는 정치적 시민성을 갖게 되었고 또 오늘날 한국사회는 그런 정치적 시민성을 갖는 시민을 필요로 하고 있다. 다문화 사회 세계화 시대 패러다임이 지배적이 되면서 이미 상당수의 외국인들과 더불어 살아가고 있다. 이제 과거 한국사회의 전통의식이 되어온 유교주의, 혈연주의, 지역주의, 권위주의 등에서 벗어나서 합리적 이해관계와 득실에 기초를 둔 정치공동체의 갈등조정방식은 한국인들에게 떠날 수

없는 정치적 시민성의 영역으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다. 또한 여야의 평화적인 정권교체에 이은 과거 정권을 장악한 경험 있는 정당의 재집권은 시민들의 균형적이고 견제적인 의식을 배양하는 계기가 되고 있다. 시민사회의 성숙함과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인하여 서구에서는 오랜 민주정치발전기에 경험했던 일들을 해방 이후 45년 만에 압축과일로 정리해 놓고 갈등을 해결해 나가는 한국시민들이 늘어나고 있다.

2009년 사회통합위원회의 출범을 계기로 해서 보수와 진보 진영의 대결로 인해 한국사회가 파국으로 가는 것을 막기 위한 노력들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보수와 진보의 경쟁에서 경쟁의 물을 만들고 어느 일방이 정권을 창출하든 간에 국가를 전체로 바꾸겠다는 생각과 이단세력을 발본색원하겠다는 생각을 버려야 하며 국가를 새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정책과 정부를 새로 만드는 게 목표가 되어야 한다는 합의가 마련되어 가고 있다. 인간을 중시하고(인본주의), 민주주의와 시장제도를 수용하며(민주주의와 시장제도), 외국과의 관계는 평화와 번영을 목표로 하고(평화와 번영의 대외관계), 다양한 의견을 존중하며(정치적 사회적 다원주의), 약자를 보호하고(사회적 약자의 보호), 개인뿐만 아니라 공동체를 함께 존중(개인주의와 공동체주의 동시존중)하는 데에 대해서 보수 진보의 이념이 한 통이 되어야 한다는 룰이 마련되어 가고 있다. 이런 모습에서 한국의 연합민주주의는 한층 발전해 나갈 것으로 생각된다.

2010년 6월 2일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중심으로 정치참여에 대한 집중적인 홍보가 이뤄지고 있다. 시민들의 정치적 성숙도는 기본적인 정치지식과 정치적 인식, 정치적 선호형성, 정치적 참여, 정치적 관용을 필요로 한다. 근본적으로 한국의 정치참여 특히 선거참여율을 높이기 위한 방안들이 모색된다. 민주시

민교육을 통해서 시민들이 정치(공공참여)에 관심을 높이는 방향들이 모색된다. 즉 시민들의 의식과 문화를 개선하는 문제이다. 스웨덴 같은 국가는 정치참여를 높이기 위해서 국가적 차원에서 시민학교 스터디 서클을 개설해 대다수 국민들이 합리적 유권자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제도상으로 강화해온 국가다(장정애, 1~5). 스웨덴은 시민교육제도와 기관에서 합리적이고 비판적인 시민을 양성하는 것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존재해 왔다. 시민학교는 스웨덴 전역에 150여 개가 있는데 18세 이상의 성인교육기관이며 스터디 서클은 시민학습 동아리와 같은 것이며 최소 5~7인 이상이 결성되어 각종 시민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면 스웨덴 시민교육위원회가 예산을 지급하여 시민으로 하여금 시민교육의 기회를 갖도록 한다. 이런 노력의 결과 스웨덴은 80% 이상의 투표율을 기록하고 있다. 현재 한국의 지방선거의 투표율은 1회 지방선거(95년) 68.4%, 2회 지방선거(98년) 52.7%, 3회 지방선거(2002년) 48.9%, 4회 지방선거(2006년) 51.6%의 저조한 투표율과 함께 연령대별 투표율에서 보더라도 20대의 투표율이 제일 낮게 나타나고 있다.

또한 정당정치의 문제점을 극복해서 시민들의 정치적 시민성을 보다 합리적이고 비판적이면서 참여를 높이는 차원으로 향상시켜야 할 필요가 있다. 정당은 정권창출을 최고의 목표로 두지만 정당을 지지하는 층을 넓혀 나가는 가운데 국민들에 대한 정치교육을 담당해야 할 책임 또한 있다. 그리고 정치적 시민성을 함양해 나가기 위해서는 제도적 보완을 해나가야 한다. 가령 많은 국가들에서 시행하고 있는 의무투표제를 선택적으로 도입하는 방안도 강구될 필요가 있다. 이런 노력들을 통해서 한국사회의 시민들은 보다 고도의 정교한 정치적 시민성을 다듬어 나갈 것으로 기대해 본다.

IV. 결론

한국정치에서 1990년 3당 합당으로 촉발된 연합정치(coalition politics)의 원래적 의미는 공동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다른 정치세력과 정당들이 연합하는 것을 말한다. 시민성을 윤리적인 측면에 강조를 두어서 해석하게 되면 3당 합당은 정치 윤리 상으로는 비난을 면하기 어렵다. 왜냐하면 유권자들이 선택한 정당들이 유권자들의 의도와는 달리 정권창출에만 급급했다는 비판이 있었기 때문이다. 3당 합당 이후로 한국정치현상에 규범적인 측면이 없질 않지만 윤리 도덕보다는 보다 이해타산적인 이성의 계산적인 측면에 강조를 두는데 익숙하게 된다. 과거 선거에서 시민사회와 정당간의 연합이 있었듯이 연합정치는 시민사회에서부터 정당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정치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국사회가 복잡해지고 다원화되어 감에 따라서 기존의 정당만으로는 정치적 에너지를 생산하고 소비할 수 없다. 2010년 4월 21일 현재 한국에는 20개 정당이 존재하며 창당준비 결성신고를 마친 정당도 6개가 있다. 정권창출과 정당은 한국사회에 깔려있는 다양한 욕구와 갈등을 해결해 나가는 정치기제인데 제대로 된 역할을 하고 있는지 의심스럽다. 평상시 정당이 기능을 다하지 못한 상태에서 선거에 임해서는 특정인물을 중심으로 시민들이 규합되어서 정치현상을 리드하는 것도 한국정치의 문제다. 비록 특정인물을 중심으로 한 연대나 모임 등이 형성되더라도 특정 인물이 속한 정당으로 에너지를 모아서 정당의 발전에 기여해야 하는데, 특정 인물이 정치로부터 벗어나게 되면 규합된 시민들도 빠져나가는 문제점을 한국정치는 노정하고 있다. 정당들에 대한 낮은 충성도는 정당의 존속을 불안하게 하고 선거에 임해서 잦은 이합집산으로 나타나 정당체제가 항시 재편될

가능성을 갖고 있다(김현우, 213). 정당은 정치발전을 위해서 시민들의 정치적 사고와 행동을 인도해 나가는 역할을 갖고 있고 시민들의 정치적 시민성을 함양해 나가는데 많은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 정치적 시민성은 선거과정과 투표로 그 꽃을 피운다. 정치적 에너지는 선거를 통해 발산되고 사회적 갈등을 해결하지 못하면 정치적 엔트로피는 증대되고 혼돈과 파국현상이 나타날 것이다.

하지만 민주주의 공고화과정과 연합정치를 통해서 한국정치에서 발현되고 있는 시민들의 정치적 시민성은 정부와 체제 및 체계와의 투입 산출 과정을 통해 발전되고 있다. 특히 한국정치가 규범에 집착한 반정치적 전통(이현휘, 166)으로부터 벗어나서 대화와 타협을 통해 공적 이익을 창출하기 위한 사회적 합의를 적극적으로 모색해 나가고 있는 가운데, 정치적 시민성에는 사회통합적인 합리성을 그 내용으로서 강조할 필요가 있다. 과거 냉전시대에서처럼 체제안정과 존속을 강조하였던 윤리적인 측면에서 벗어나서 공적 이익을 창출해 나가기 위한 분별력 있고 비판합리적인 이성을 계발하는 방향으로 시민들의 정치적 시민성을 함양해야 한다.

< 참고문헌 >

- 국민윤리학회 편, 1984, 정치교육, 서울: 형설출판사.
- 김현우, 1993, '1980년대 한국인의 선거행태', 이남영 편, "한국의 선거," 서울: 나남.
- 박용현, 1973, 사회적 행동과 학습, 서울: 형설출판사.
- 신도철·민병원, 1990, '민주정치의식과 정치성숙도', 김광웅 편, "한국의 선거정치학," 서울: 나남.
- 심연수, 2008, 시민성과 교육, 광주: 광인문화사.
- _____, 2010, 2010 천안함과 대학생, 호남대신문 333호.
- 이현휘, 2010, 정치윤리의 반정치적 전통과 민주주의의 굴절, 국권상실100년 특별학술회의 논문집: 21세기 대한민국, 문화대국에의 비전과 전략, 한국정치학회, 2010년 3월 12일.
- 장정애, 2010, "지방선거와 시민교육: 합리적 시민권을 중심으로", 2010년 동아시아국제정치학회 및 한국시민윤리학회 공동준계학술회의논문집, 2010년 4월 16일.
- Stanley Allen, Renshon, 1977, Handbook of Political Socialization: Theory and Research, New York: Free Press.

The Meaning of Political Citizenship in Korean Society

Shim, Yeon-soo
(Honam University)

Abstract

South Korean citizens are developing a mature sense of political citizenship. The consolidation of Korean democratization has formed a sophisticated democracy in Korea. Recently, the Korean political system has developed toward coalition politics with a multiparty system governed by a ruling party and a major opposition party.

Political citizenship, which has appeared in the Korean political system, is becoming a full grown phenomena through systematic processing interactions (input, output, and feedback) with the government and the regime. Korean citizens are trying to escape their anti-political tradition and form a social agreement to promote the public interest through dialogue and compromise.

Korean citizens should cultivate political citizenship based on deliberative and critical rationality, rather than on the morality and conformity stressed by past political regimes for the sake of stability and continuity. This paper presents various definitions of political citizenship by using concepts from complex systems theory.

Key words : Political Citizenship, Complex System, Korean Politics, Coalition Politics, Socialization, Counter-socialization, Political Sophistication.